

“입막음 고소” vs “사실무근” 시민단체-광주환경공단, 또 충돌

시민단체 “제보 따른 공익적 의혹 제기, 입막음 고소하냐” 규탄 환경공단 “사실무근, 적법 계약·적기 인사...정치 공세 지양해야”

광주환경공단이 공단 내부 계약·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재갈 물리기”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거듭 “사실무근”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시산하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흔치 않다. 참여자처21이 제기한 부정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했다”며 환경공단을 비판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숨기 위한 과장된 대처는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환경공단 내부 의혹 관련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탄원서’ 형식의 제보에는 선임 공단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비위 정황,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전임 이사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참여자처21은 공단 내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 등이 내부 제보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등용됐던 인사들에 의한 비위 제보가 있었고, 이를 검토해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광주시에 “공단 내부 인사 과정이 통상 적절하다고 용인되는 범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보처럼 계약 비위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면 된다”라고 요구했다.

시의회와 시 감사위원회에는 “제보 진실성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에 나서야 한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제기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공단 측은 시민단체 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혹 일체를 일축했다.

환경공단은 입장 자료에서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지원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뀔 수 없다. 지난해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 중 업체 변경 계약은 4건이다. 모두 발주 부처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방계약법 검토 후 적법 절차에 따른 변경이다”라고 되받아쳤다.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시 조직 진단,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공단 내 적체 인사를 제때 한 것이다. 그동안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 못한 인사를 노조 요청에 따라 지난해 승진 인사(33명)를 봤다. 시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올해 1월 정기 인사도 올 하반기 단행한 것이다”라며 “조직 내 인사 불만 최소화, 효율 경영을 위한 인사였다”라고 반론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처21은 지난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사 앞에서 광주환경공단이 공단 내 비위 의혹 제기에 대해 고소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0일 ‘광주환경공단 선임 이사장 내정 이후 벌써부터 수의 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감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

다 이에 환경공단은 이날 2일 참여자처21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슬비기자



빈대 관련 안내문

빈대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8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빈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대아파트 대량 인수계약 후 소개비만 ‘꿀꺽’

건설사로부터 분양 전환 민간 임대아파트 수백 세대를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소유 등기 이전 없이 수수료 명목 거액만 받아 잠적한 전직 국세청 공무원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민간 임대아파트 285세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소개비·수수료 36억 원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A(70)씨와 B(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소재 건설사에서 경북 지역 임대아파트 내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285세대를 대량 인수하겠다고 계약한 뒤, 분양 대행 자회사 대신 챙기는 소개비(컨설팅 비용)와 실비 명목으로 36억 원만 받아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시공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가급적 빨리 분양으로 전환, 시세와 해당 세대의 대출금·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보전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공사 분양 전환 대행 자회사는 A씨

일당이 분양 미전환 세대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맺자, 소개비 30억 원과 등기 이전·세무 명목 수수료 6억 원 등 총 36억 원부터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해당 세대의 소유권 등기 이전은 하지 않은 채, 입금 사실 확인 직후 통장 분실 신고를 했다. 공장 재발급 받은 통장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시공사 측이 다시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후 A씨는 36억 원 중 16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송금하고,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나머지 피해액 19억 원은 수사에 나선 경찰이 급히 A씨의 계좌 거래 정지 요청을 해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2월부터 공모한 B씨를 시켜 소개비·수수료가 입금되면 빼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해당조 분양 미전환 세대 인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수권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